



‘전남권 의대’ 지역이기주의 부추기는 동·서부 국회의원

김문수·김원이 의원, 각각 순천의대·목포의대 법안 제안 설명
‘정부 추천 대학 道 공모’ 진행상황 또 ‘각자도생’ 행보 빈축
지역구 소재 대학 설치 정치 논리...의대 신설 무산 위기감 ↑

전남 동·서부 국회의원들이 각각 순천대 의대와 목포대 의대 설치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회에서 제안 설명에 나서는 등 전남권 의대 설립을 둘러싼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남권 의대 설립 대학 정부 추천’을 위한 전남도의 공모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각자도생식’ 의대 관련 행보는 2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또 다시 반복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순천대가 전남도 공모 불참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이 전남권 의대 설립에 한 목소리를 내는 커녕, 자신들의 지역구 소재 대학에만 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정치 논리’를 앞세우면서 자칫 전남권 의대 신설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2개 법안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 및 혜택이 차이가 나는 의료 불균형 국가”라며 “의료 사각지대나 취약지가 존재하는 등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차원에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지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남도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라며 ▲상급

종합병원 현황 ▲응급의료시설과 종합병원 접근성 ▲중증의상환자 전원을 ▲입원 및 외래진료 자체 충족 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의자수는 전남도가 17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부족하다”며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고 모집 인원을 1천400명 늘렸지만 모두 기존 의대 4개 학교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의대 없는 지역에 대한 정부 조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법안은 ▲국립순천대에 의대 및 대학병원 설치 ▲입학 정원 100명 안팎 ▲국가 예산 지원 ▲국공유재산 무상 양여 및 기금 조성 등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위에 상정된 순천대 의대 법안은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같은 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도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설명을 했다.

김원이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목포대 의대 설립 특별법안을 설명하게 돼 뜻 깊다”며 “이 법안은 국립목포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병행 운영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분포하는 곳이 전남이며 6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를 맞았다”며 “전남 서부권 등 섬 지역 중증 응급환자는 배를 타고 나와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위중한 상태에 이르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전남의 취약한 의료 현실을 소개했다.

▶2면에 계속
/김진수·김재정 기자



대학 캠퍼스에 물놀이장 개장
덥고 습한 무더운 날씨에 폭염특보까지 발효된 24일 광주 북구 두암동 동강대학교 운동장에 개장한 야외 물놀이장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북구는 산동교 천수공원과 동강대 운동장에 무료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 등을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관련기사 5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해야” 한목소리

김영록 지사·전남 국회의원 10명, 공동 성명 발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실질적 자치 권한 부여’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 국회의원 10명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와 신정훈 국회의원 등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은 24일 서울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자치권한 부여 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전남 인구는 180만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며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임에도 고령화를 전국 1위, 매년 8천명의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88조원 중 2조원 역의 유출까지 삼중·사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인구 감소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인·자치 권한 부여 등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 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중앙 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 권한이 없다 보니 에너지·관광·농어업·사회보장제도 등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지 못해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전남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대표 모델이자,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

난달 11일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등 17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담긴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향·향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육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김재정 기자

Today

해리스 vs 트럼프 가상대결 ‘박빙’ 8면
광주·전남 아이울음소리 커지나 12면
‘김도영 시대’ 열대야도 행복해요 16면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전광판 사진

남양정보기술(주) ☎ 광고문의 062) 231-1355